

8.4.24
2000. 5.14
연구보고
공신

가버넌스 시대와 개방형 직위제도

박영숙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종래의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government)의 시대가 다양한 행위자들의 파트너십에 의한 가버넌스(governance-협치)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이다. OECD는 <미래의 정부-Government of the Future, 2000>보고서에서 새로운 시대적 현상으로 정부의 역할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제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독점할 수 없으며 다른 주요 행위자들과 정책결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오늘의 국제사회의 공통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규범적 개념과 지구환경문제를 관리, 운영하는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가버넌스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구환경에 직면하면서 국제 공공재의 운영 및 관리는 국가를 초월한 전 인류의 예지를 모아야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데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정을 시민과 함께' 라는 시정의 풍향에 따라 자치체에 따라서는 여러 민간기구를 설치하여 시민의 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된바 있는 지구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 21>에 의거 구성된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역할은 중시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과 기업대표 그리고 시민대표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가버넌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성을 검토, 심의하는 권한을 조례에 의거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은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기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부문의 민간전문가를 행정요원으로 충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도부터 국정지 핵심 개혁과제로서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임용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부처에 따라서는 개방형임용제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인 임용실적은 저조하다고 한다.

개방형임용제도는 가버넌스시대에 부합되는 인사행정으로서 보다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문리

306

민간인 임용실적은 낮아져야 한다.

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다

인

민간인 임용실적은 저조하다

민간인 임용실적은 낮아져야 한다

제도

민간인 임용실적은 낮아져야 한다

가버넌스 시대와 개방형 직위제도

박영숙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종래의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government)의 시대가 다양한 행위자들의 파트너십에 의한 가버넌스(governance-협치)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이다. OECD는 <미래의 정부-Government of the Future, 2000>보고서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청으로 정부의 역할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제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독점할 수 없으며 다른 주요 행위자들과 정책결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오늘의 국제사회의 공통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규범적 개념과 지구환경문제를 관리, 운영하는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가버넌스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구환경에 직면하면서 국제 공공재의 운영 및 관리는 국가를 초월한 전 인류의 예지를 모아야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데서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정을 시민과 함께' 라는 시정의 풍향에 따라 자치체에 따라서는 여러 민간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된바 있는 지구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 21>에 의거 구성된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역할은 중시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과 기업대표 그리고 시민대표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어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가버넌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성을 검토, 심의하는 권한을 조례에 의거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은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기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부문의 민간인전문가를 행정요원으로 충원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정신을 인사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고한 4

정부는 작년도부터 국정 의 핵심 개혁과제로서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임용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민간인 임용실적은 저조하다 부처에 따라서는 개방형임용제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방형임용제도는 가버넌스시대에 부합되는 인사행정제도로서 보다 적극 추진되어 변화해 가고있는 정부역할을 뒷받침해야 한다.

Final

가버넌스 시대와 개방형 직위제도

박영숙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종래의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government)의 시대가 다양한 행위자들의 파트너십에 의한 가버넌스(governance-협치)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이다. OECD는 <미래의 정부-Government of the Future, 2000>보고서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청으로 정부의 역할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제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독점할 수 없으며 다른 주요 행위자들과 정책결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오늘의 국제사회의 공통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규범적 개념과 지구환경문제를 관리, 운영하는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가버넌스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구환경에 직면하면서 국제 공공재의 운영 및 관리는 국가를 초월한 전 인류의 예지를 모아야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데서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정을 시민과 함께' 라는 시정의 풍향에 따라 자치체에 따라서는 여러 민간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된바 있는 지구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 21>에 의거 구성된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역할은 중시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과 기업대표 그리고 시민대표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어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가버넌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성을 검토, 심의하는 권한을 조례에 의거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은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기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부문의 민간인전문가를 행정요원으로 충원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정신을 인사행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도부터 국정지 핵심 개혁과제로서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임용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민간인 임용실적은 저조하나 부처에 따라서는 개방형임용제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개방형임용제도는 가버넌스시대에 부합되는 인사행정 제도로서 보다 적극 추진되어 변화해 가고있는 정부역할을 뒷받침해야 한다.